

# **The Unskilled Foreign Labor and Employment Permitment Policy**

**Sung-Joon Park**





---

## 발 간 사

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국내 근로자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다. 국제적으로 WTO체제의 출범은 자본은 물론 인력의 국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장 큰 유입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국내 단순인력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외국인력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의 유입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업에는 비용을 가중시켜 고용허가를 받을 인센티브가 없으며, 따라서 허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이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불법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비록 도입하더라도 수요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인 업종·규모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 기업체에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본원의 박성준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김은희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

## ABSTRACT

Whenever allowing the unskilled foreign labor into the country, policy makers must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

At first, is there the social need to receive the unskilled foreign labors?

Secondly, whether or not they are economically beneficial to the economy and society.

Thirdly, whether or not and to what extent, social cost occurred with them.

Finally, if the social optimal size of them is found, how to achieve this goal? Is the employment permitment policy is the best tool?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especially the final question. This paper finds that the employment permitment policy is never helpful to achieve the social optimal size of the unskilled foreign labors and nevertheless if this policy is adapted, it must be applied to the industries whose labor demands are more elastic.



---

## 목 차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단순기능 해외노동력의 국내취업 배경 / 18

1. 노동공급 측면(수출국의 push 요인) / 18
2. 노동수요 측면(수입국의 pull 요인) / 22

### 제3장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 28

1. 중소기업 인력난의 경제학적 의미 / 28
2. 외국인력의 경제학적 파급효과 / 30
  - 1) 국내경제(GDP)에 미치는 효과 / 31
  - 2) 자본( $K$ )에 미치는 효과 / 32
  - 3) 국내인력에 미치는 효과 / 34
3. 사회적 비용 / 36
  - 1)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사회적 적정수준 및 문제점 / 37
  - 2) 외국인 고용허가제 / 39

### 제4장 외국인 노동수요 탄력성 추정 / 43

1. 추정모형 / 43

- 2. 추정자료 / 47
- 3. 추정결과 / 51

**제5장 결론 / 56**

**참고문헌 / 59**

**부록 / 61**



---

## 표 목 차

- <표 1> 민족 및 체류자격별 기본적 특성 / 19
- <표 2> 국적별 산업기술 연수생 및 불법체류자 동향 / 20
- <표 3> 1인당 GNP의 국제비교 / 21
- <표 4> 인력부족률 변동추이 / 22
- <표 5> 생산 관련직의 사업체 규모별 인력수요 현황 / 23
- <표 6> 인구증감 추이 / 23
- <표 7>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비중 추이 및 진학률 / 24
- <표 8>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 / 25
- <표 9> 임금상승률 및 사업 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 25
- <표 10> 규모별 단순노동비용(1993) / 26
- <표 11>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이 어려운 이유 / 27
- <표 12> 표본의 구성(업종별) / 48
- <표 13> 표본의 구성(기업 규모별) / 48
- <표 14> 표본기업(업종별)의 변수별 평균값 / 50
- <표 15> 표본기업(규모별)의 변수별 평균값 / 50
- <표 16> 업종별 회귀계수 추정치 / 51
- <표 17> 규모별 회귀계수 추정치 / 51
- <표 18> 업종별 노동수요 탄력성 / 53
- <표 19> 규모별 노동수요 탄력성 / 53

---

## 그림목차

- <그림 1> 단순 기능인력의 수요와 공급 / 29
- <그림 2> 단순 기능인력 이외의 인력시장 / 32
- <그림 3> 외국인 근로자수의 사회적 걱정수준과 기업의  
걱정수준과의 괴리 / 37
- <그림 4>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걱정수준으로의 접근 / 40
- <그림 5> 외국인 근로자 수요곡선 / 41

---

## CONTENTS

- I . **Introduction** / 15
- II . **The Reason for Korea to Import the Unskilled Foreign Labor** / 18
  - 1. Foreign labor supply side / 18
  - 2. Domestic labor demand side / 22
- III . **The Economic Impact by Importing Foreign Labor** / 28
  - 1. The economic meaning of labor shortage in the small-medium size industry / 28
  - 2.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 30
    - 1) The impact on GDP / 31
    - 2) The impact on Capital / 32
    - 3) The impact on domestic labor / 34
  - 3. The social cost / 36
    - 1) The social optimal size of the unskilled foreign labors / 37
    - 2) The employment permitment policy / 39

#### **IV. The Estimation of the Elasticity of the Foreign Labor Demand / 43**

- 1) The model / 43
- 2) Data / 47
- 3) Estimation / 51

#### **V. Conclusion / 56**

#### **References / 59**

#### **Appendix / 61**

## 제1장 서론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노동력을 외국에 수출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다. 정부의 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95년 말 현재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량은 10만 명<sup>1)</sup>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국내 근로자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5년 현재 생산 관련직 부족인원은 약 18만 명에 이르며 이는 총부족률로 약 3.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는 한때 경기변동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력난의 가중으로 외국인력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들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외국인력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 3D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줌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둘째,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고임금, 인력부족과 같은 대내적 요인과 동남아 국가들의 저임금, 고실업, 높은 노동력 증가에 기인한 대외적 요인에 의해 외국인력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 여기에서는 불법취업자 6만 여명, 중기협 협력단 연수생 4만 여명 및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1만 여명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외국인력 수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대두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반면, 외국인력 유입에 소극적인 입장의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과 둘째, 아직 국내 유희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셋째,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91년 법무부 훈령에 의해 산업인력 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수생들의 기업체로부터의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이 급증하는 등 제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면서 연수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활용의 정책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들 사회적 문제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통상자원부 및 중기협은 현행 연수생제도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불법취업자 및 무분별한 무자격자의 유입 등의 당면문제가 현행제도 하에서 해결이 가능하느냐 또는 불가능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즉,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외인력의 관리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고용허가제는 인력수입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반면 전자의 고용허가제 주장을 보면, 현행 제도는 불법취업자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많으며 더욱이 연수생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에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력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외국인력 활용이 과연 우리 경제에 유익한

가 하는 점이고,<sup>3)</sup>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력 활용의 반대입장이 주장하는 여러 문제가 해소되는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단순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들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한지를 밝힌다. 제3장에서는 이들 외국인력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

3) 한국경제신문 2월 17일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가열

## 제2장 단순기능 해외노동력의 국내취업 배경

산업연수의 형태이든 불법취업이든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은 1990년 초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우선 외국 노동력의 국내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노동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노동공급 측면(수출국의 push 요인)

이 절에서는 어떠한 외국인력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지, 즉 어떤 특성을 가진 외국인력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간 노동이동은 국내에서의 직장이동 분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의 이동모형을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PV = \sum_{t=1}^T \frac{B_{2t} - B_{1t}}{(1+r)^t} - C$$

$PV$  : 이동에 의한 순이익 현재가치

$B_{2t}$  : t년도 기준으로 새로운 지역에서의 기대소득

$B_{1t}$  : t년도 기준으로 현재 지역에서의 소득

$T$  : 새로운 지역에서 예상되는 근무기간

$r$  : 할인율

$C$  : 이동에 따른 물적, 정신적 비용



이 모형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일 수록 이동이 용이함을 볼 수 있다. 젊을수록 T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에 따른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커지고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작다. 이들 계층에서도 특히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기혼자 중에서도 부양가족이 없는 자가 보다 이동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적게 든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정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직장 탐색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이동 가능성이 큰데, 이는 남성은 1차 노동력에 속하고 여성은 2차 노동력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은 이상의 설명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1> 민족 및 체류자격별 기본적 특성

구 분	중국교포 불법	기타외국 불법	산업기술 연수	전 체
남자 비율(%)	59.6	86.9	58.8	74.8
평균 연령(세)	43.42	29.78	27.0	32.91
기혼자 비율(%)	80.8	41.6	28.8	49.9
교육년수(년)	10.58	10.58	11.56	10.75
평균 입국비용(US\$)	1,147.36	2,005.52	1,591.21	1,835.16

자료 : 외국인력정책과 인권보호, 95. 4. 노동정책연구소

다른 한편,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와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인력이 쉽게 유입되는 것은 우선 교통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며 또한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표 2>에서 산업기술생 및 불법취업자의 분포 면에서 중국계, 특히 중국교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적별 산업기술 연수생 및 불법체류자 동향

(95. 7. 31 현재)

	산업기술 연수생		불법체류자	
	인원(명)	구성비(%)	인원(명)	구성비(%)
총 계	34,931	100.0	61,472	100.0
중 국 (교 포)	15,070	43.1	25,970 (20,722)	42.2 (33.7)
필 리 핀	5,761	16.5	8,476	13.7
베 트 남	4,369	12.5	-	-
방글라데시아	2,087	6.0	5,533	13.8
인도네시아	2,213	6.3	2,222	9.0
스 리 랑 카	1,447	4.1	2,417	3.6
태 국	329	9.4	1,653	3.9
기 타	3,655	10.5	15,201	2.7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외국인 관련현황, 1995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회소득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기회소득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즉 모형에서의  $(B_{2t} - B_{1t})$ 이 클수록 외국인력 유입의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소득수준을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신 1인당 GNP를 비교해 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인력이 유입해 들어옴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이동대상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불법체류에 대한 감시를 강화monitoring 하면, 취업 후 예상되는 기대소득이 줄게 되며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거래비용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경간 노동인력을 규제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3> 1인당 GNP의 국제비교

(단위 : US \$)

	1980	1985	1990	1991	1991년 한국대비 각국 GNP(%)
중 국	290	320	370	370	5.5
필 리 핀	700	580	730	740	11.0
방글라데시아	140	150	210	220	3.3
파 키 스 탄	290	340	380	400	5.9
스 리 랑 카	260	380	470	500	7.4
인도네시아	480	530	570	610	9.0
네 팔	130	160	170	180	2.7
한 국	1,522	2,242	5,883	6,757	100.0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1, 1994  
The World Bank, World Tables, 1987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수입정책은 관계 부처간의 이견조정 실패 및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부재로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한 예로 92년 6월 자진신고한 6만 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허용을 총 4번씩 연장 조치를 거쳐 94년 6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국내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을 반복적으로 시한부 합법화해 줌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조차도 정부의 조치나 법적 규정 등을 무시해도 좋다는 인상이자 심어주고 있다.

## 2. 노동수요 측면(수입국의 pull 요인)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력난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 1991년을 정점으로 다소 경감되고 있으나, 경기의 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1994년 전체 인력부족률은 3.57%이다. 이들 업종별·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29%,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3.57%, 생산직이 5.60%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생산 관련직 부족률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인력부족률 변동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전 체	4.43	5.48	4.26	3.62	3.57
제 조 업	5.55	7.02	4.87	4.39	4.27
생 산 직	6.95	9.07	6.76	6.04	5.64
300인 미만	5.65	7.04	5.23	4.59	7.71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 보고서, 해당년도

<표 5> 생산 관련직의 사업체 규모별 인력수요 현황

(단위 : %)

구 분	1994년 부족률
7/8 생신 관련직 총수	5.64
중소규모(10-299인)	7.71
대규모(300인 이상)	1.84
1 규모(10-29인)	10.03
2 규모(30-99인)	7.56
3 규모(100-299인)	5.95
4 규모(300-499인)	2.55
5 규모(500인 이상)	1.67

자료 :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 1995

이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 특히 중소기업 생산직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은 국내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커다란 변화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첫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증가율의 대폭적인 감소로 젊은 층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표 6> 인구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1
인구	25,012	32,241	38,124	42,689	46,789	49,683	50,586
증가율	3.0	2.04	1.57	0.93	0.77	0.37	△0.01

자료 :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통계청, 1993

둘째, 급격한 고학력화를 들 수 있다. <표 7>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2년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학력화는 근로자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임금상승뿐 아니라 여가시간을 보다 많이 가지려는 등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표 7>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비중 추이 및 진학률

(단위 : 천 명, %)

	고학력 취업자	전체 취업자	비 중
1980	913	13,706	6.7
1985	1,529	14,935	10.2
1990	2,462	18,036	13.7
1991	2,679	18,576	14.4
1992	3,036	18,921	16.0
1993	3,324	19,203	17.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셋째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D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8>에 의하면 생산적 인력부족 요인 중 “힘들다고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 때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

원 인	1	2	3	0	계
· 임금이 낮아서	35	38	46	153	39
· 작업환경 및 복지후생이 나빠서	12	39	53	168	32
· 힘들다고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 때문에	164	51	21	36	87
· 사회 전반적으로 인력양성이 부족해서	33	36	33	170	34
· 아직 및 스카웃 때문에	8	31	35	198	23
· 대기업 선호성향 때문에	19	49	33	171	33
· 고용정보가 부족해서	1	6	14	251	6
무 응 답	19				

주 : '계'는 각 경우의 가중평균임.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인력 수급현황과 방안에서 인용

특히, 중소기업의 단순 기능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요인은 이상의 세 가지 외에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으로의 근로자 이탈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임금상승률 및 사업 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 천 원/월)

		1990	1991	1992	1993	1994
전체 임금상승률		18.8	17.5	15.2	12.2	12.7
사업 체 규모 별	10-29인	549(78.7)	633(78.7)	740(80.4)	854(79.8)	969(81.2)
	30-99인	572(81.9)	676(84.1)	794(86.3)	888(83.0)	995(83.3)
	100-299인	603(86.4)	736(91.5)	841(91.4)	921(86.1)	1,046(87.6)
	300-499인	698(100)	804(100)	920(100)	1,070(100)	1,194(100)
	500인 이상	741(106.2)	892(110.9)	1,019(110.8)	1,164(108.8)	1,338(112.1)

자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각 호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외국인력 국내유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단순인력의 수입이 불가피한가.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먼저, 이들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동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방법이다. 노동시장에 맡길 경우 초과수요는 결국 임금인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자연적으로 공급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노동비용이 높아 추가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기계화로 부족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인력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표 10> 규모별 단순노동비용(1993)

	10·19인	20·99인	100 299인
단위노동비용 (300인 이상=100)	172	149	12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인용, 1996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화·기계화는 일단 비용이 비싸고, 이미 생산 공정상 더이상 자동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해외진출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에 따른 거래비용transaction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170만 명에 가까운 유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일 것이



다. 실제로 단순인력의 부족은 약 15만 명일 것으로 고려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과연 이들 인력이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이냐가 의문시되며, 기업측 입장에서도 3D업종은 여성이나 고령자들보다도 젊은 남성인력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보면 이 방안 역시 별 실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방안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단순 외국인력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이 어려운 이유

이유	1	2	계
· 생산공정상 더이상 자동화가 어렵다.	45	19	34
· 자동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64	40	54
· 경영전망이 불확실하여 시설투자가 어렵다.	33	49	40
· 자동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동화 추진방법을 모른다.	3	12	7

주 : '계'는 각 경우의 가중평균임.

자료 : 산업연구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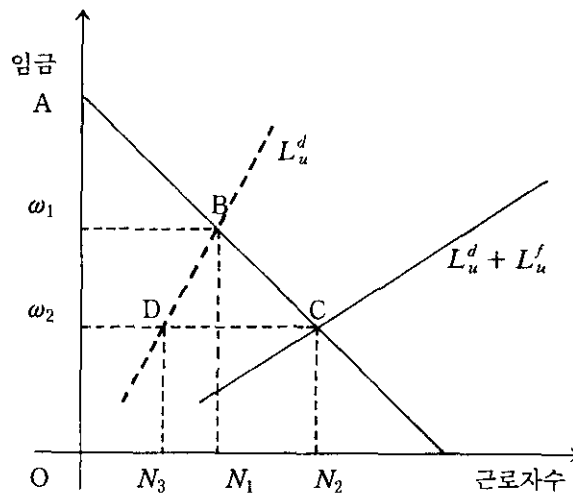
### 제3장 외국인력 활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하나로 인력난을 꼽고 있으며 이의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업체에서 산업연수생 또는 불법취업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견해들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을 가늠하고자 한다.

#### 1. 중소기업 인력난의 경제학적 의미

먼저, 외국인력 유입이 없어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할 경우 단순인력의 임금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mega_1$ 이고 고용은  $N_1$ 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omega_1$ 의 임금을 주는 경우 생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omega_2$ 의 임금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 단연 국내 노동인력의 일부는 떠날 것이고, 일부는  $\omega_2$ 를 받은 채 머물게 되어 고용량은  $N_3$ 가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금이  $\omega_2$ 가 되면  $(N_2 - N_3)$ 만큼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시장 메카니즘에 맡길 경우 B지점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함으로써 균형도 이루게 되나 인위적으로 임금을  $\omega_2$ 로 책정함으로써  $(N_2 - N_3)$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단순 기능인력의 수요와 공급



그러면  $(N_2 - N_3)$ 만큼의 부족인력을 과연 국내 가용인력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 정부는 가용인력 활용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사회공익 요원의 산업인력으로서의 전환, 주부 및 고령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젊은 남성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부·고령자 등은 주로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full-time job보다는 part-time job을 선호하는 것 등으로 국내 가용인력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 2. 외국인력의 경제학적 파급효과

이 절에서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논리적 기반을 경제학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1개 국가(또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Q = f(K, L_u, L_s)$$

$K$  : 자본

$L_u$  : 단순인력unskilled worker

$L_s$  : 국내 기능인력skilled worker

$Q$ (또는 GDP) : 생산량

문제는 국내 단순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한다는 의미로 이는 결국

$$L_u = L_u^d + L_u^f$$

$L_u$  : 총단순인력

$L_u^d$  : 국내 단순인력

$L_u^f$  : 외국 단순인력

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L_u^f$ 가 유입됨으로써 이것이 미치는 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 생산함수에서 볼 수 있듯이  $L_u^f$ 는 첫째, 생산량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GDP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자

본, 국내 기술인력과 국내 단순인력에 효과를 미치므로 이를 차례차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 국내경제(GDP)에 미치는 효과

다시 <그림 1>로 돌아가 ( $N_2 - N_3$ )만큼의 외국인력을 유입할 경우 이것이 국내 경제 또는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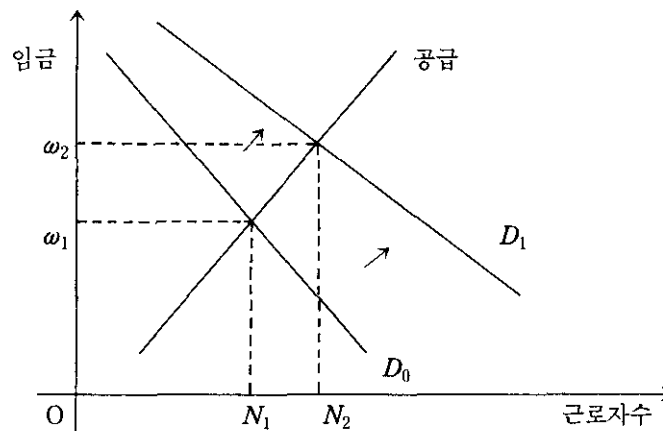
먼저 C점에서 균형을 이루므로 이 기업은 낮은 가격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단연 소비자에게 이익benefit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omega_1$ 대신에  $\omega_2$ 의 임금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격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기업가는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이윤이  $\Delta A\omega_1B$ 에서  $\Delta A\omega_2C$ 로 증가하게 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국내 경제에 대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낳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여차피 그들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게 되며, 이는 곧 국내시장의 소비수요 확대로 연결되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수요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난다.

요약하면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기업은 싼 임금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특히 이윤의 증대를 가져와 투자유인이 발생함으로써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력의 소비는 이들과 대체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의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2> 단순 기능인력 이외의 인력시장



## 2) 자본( $K$ )에 미치는 효과

단순 외국인력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 중 하나가 이들 인력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 절약적 노력을 게을리하여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본과 외국 단순인력과의 대체substitution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는 자본과 단순인력 간에 대체관계gross substitution인지 보완관계gross complement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대체관계라면 단순 외국인력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므로 가능한 한 수입을 억제해야겠으나, 만약 보완관계gross complement라면 이들 인력의 수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가정하기를 X제품을 Q만큼 생산하는 데 생산요소로 자본(K)과 단순인력( $L_u$ )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생산함수는  $Q = f(K, L_u)$ 가 된다.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L_u$ 의 가격이 떨어지면, K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대체관계 gross substitution인가 보완관계 gross complement인가가 결정된다.

$L_u$ 의 가격하락은 상대적으로 K가격이 비싸져 K대신  $L_u$ 를 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며(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반면에  $L_u$ 의 가격하락은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는 총제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자본의 증가(규모효과 scale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

수입반대 입장에서는 결국 대체효과가 규모효과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체효과에 비해 규모효과가 크다는 논의는 성립되지 않는가. 따라서 이에 대한 결론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증분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단순 외국인력 수입의 역사가 일천하여 실증분석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유추하기로 한다. 이미 제2장의 <표 11>에서 보듯이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동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생산공정상 더이상 자동화가 어렵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 비용이 비싸다”라는 의미는 자본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값이 싼 단순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므로, 가령 단순 외국인력 수입이 금지될 경우, 즉 단순인력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간다. 오히려 자동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업종전환이 보다 손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나타나는 한편, 제조업 공동

화 현상도 상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공정상 어렵다”는 의미는 반대 입장이 주장하듯이 대체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실증분석에 의존하여야 하나, 아직 그럴 단계가 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대 입장이 주장하듯이 대체관계gross substitution가 나타나기보다는 보완관계gross complement가 보다 크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 3) 국내인력에 미치는 효과

이미 생산함수에서 보았듯이 노동인력이 국내 단순인력과 기술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외국 단순인력의 유입이 이들 인력에 미치는 효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내 단순인력은 외국 단순인력과 거의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은 곧 단순인력의 공급증가로 나타나 이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단순인력의 임금은  $\omega_1$ 에서  $\omega_2$ 로 떨어지고 고용은  $N_1$ 에서  $N_3$ 로 떨어져 총소득이  $\square\omega_1ON_1B$ 에서  $\square\omega_1ON_1D$ 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단순 국내인력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직된 국내 단순인력, 즉  $(N_1 - N_2)$  인력이 만약 서비스 업종으로 진출할 경우 이 부문에서의 노동시장이 초과수요tight인 경우라면 몰라도 초과공급loose이라면 이 부문의 실업률을 가중시켜 그나마 이 부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가용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게 한다.<sup>4)</sup> 다시 말해 단순 외국인력의 유입은 제조업, 특히 3D업종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근로자의

---

4) 실망실업 효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가용인력을 사장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이상이 단순 외국인력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이다. 분명히 이 견해에는 한편에서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외국인력의 유입이 없이 시장 메카니즘에 맡길 경우 단순 국내인력의 임금은  $\omega_1$ 이 될 것이고, 고용은  $N_1$ 이 되어 기업의 노동비용은  $\square \omega_1 O N_1 B$ 가 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비용이 과도하여 임금이 보다 싼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업종 전환 또는 도산까지 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종사하고 있던 국내 근로자( $N_3$ )에게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업이 서비스 업종에 부담을 주어 이 부문 노동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있는 유휴노동력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국내 기술인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국내 기술인력은 국내 단순인력과 같이 대체관계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완관계일 경우 기술인력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 하에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가. 생산과정에서 기술인력과 단순인력(국내 단순인력+외국 단순인력)이 대체관계라 할지라도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단순인력 임금저하의 규모효과(scale effect)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보다 크면 보완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대체효과와 규모효과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력의 유입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노동인력의 증가를 통해 총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규모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공정에 따라서는 기술인력과 단순인력 간의 보완관계일 경우가 많다.

이렇듯이 단순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단순인력과 기술인력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2중 구조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외국인력의 유입은 이들 인력과 대체 가능성이 큰 국내 단순인력을 제외하고는 크게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주, 소비자 및 외국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이 없거나 심지어는 보완관계가 있는 기술인력에 이득benefit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 외국인력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positive 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계층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negative 면도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들 이득을 입는 계층의 이득이 손실을 보는 계층(국내 단순인력+가용인력 중 실망실업자)의 손실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큰가이다. 만약 이득이 손실보다 작다면 단순 외국인력의 유입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negative(-)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회복지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득의 일부로 단순인력의 손실분을 보상할 수 있어 외국인력의 유입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positive(+ )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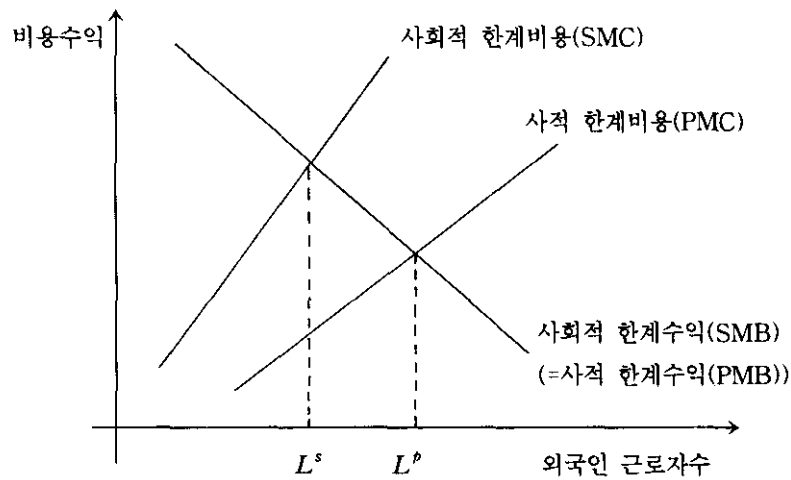
### 3. 사회적 비용

외국인력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장기체류로 인한 외국인력의 실업증가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이들 인력의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초래하며, 인권 문제 등으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일 민족국가로써 외국인력의 유입은 문화적, 사회적 및 민족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1)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사회적 적정수준 및 문제점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잘 갖춘다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반면에 이들 인력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가는 국가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킨다. 따라서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적으로 적정optimal한가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3> 외국인 근로자수의 사회적 적정수준과 기업의 적정수준과의 괴리



이를 <그림 3>을 참조하면서 살펴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적 수익private marginal benefit과 사회적 수익social marginal benefit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과 사회적 한계수익-social marginal benefit이 일치하는 수준인  $L^s$ 가 사회적으로 가장 적당한 외국 근로자수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 외국인력( $L^s$ )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한 비록 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윤극대화의 논리상 사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L^b$ 가 적정한 외국인력이 되므로  $L^b$ 와  $L^s$ 와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발생한다. 비록 정부가  $L^s$ 를 찾아  $L^s$  이상의 외국인력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 $L^b - L^s$ )만큼의 불법 외국인력이 유입될 것이고, 이런 경우 정부는 이들 불법 외국인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정부가 사회적 적정수준인  $L^s$ 를 찾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을 해야 하며, 이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가 거의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가져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되며, 실령 올바른  $L^s$ 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동안 경직성을 띄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직성이 국내 노동시장 변화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 $L^b - L^s$ )만큼의 불법인력의 발생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적 규제를 감행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는 결국 사회적 추가부담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력의 사회적 적정수준을 찾을 수 있는가, 또한 비록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인력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외국인력 수입정책을 세우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정책이 상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마냥 외국인력

유입을 축소방관한다면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할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최근 외국인력의 수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이다. 소위 「고용허가제」는 체류허가(법무부)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단순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노동허가(노동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 때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소위 고용세를 부과하고 이들 외국인에 대한 국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국내법상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적극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인력시장의 무단이탈과 불법취업을 줄이고 이들 외국인력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논리이다. 반면 이의 반대 입장은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단이탈이 방지되는 것도 아니며, 특히 불법취업은 산업연수생이 아닌 관광비자나 친지방문 형식으로 들어와 취업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이 법규화될 경우 외국인력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주택 문제, 사회복지 문제, 결혼 및 가족 입국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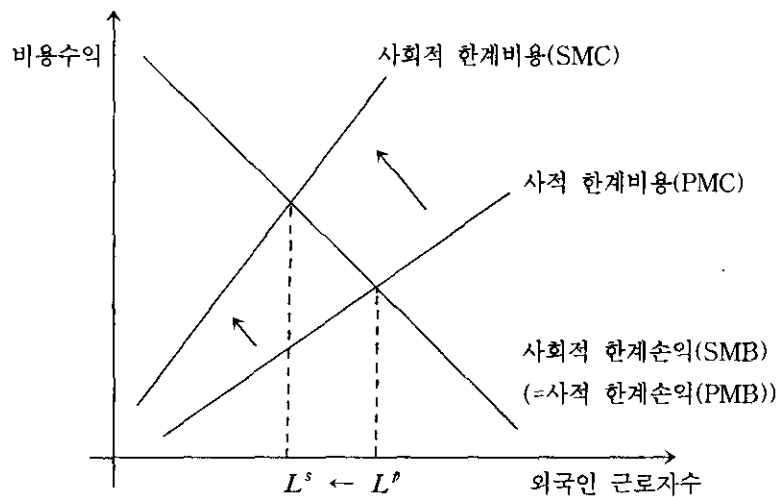
「고용허가제」는  $L^b$ 를  $L^s$ 로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책이라고 사려된다.

정의상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노동법상의 보호

5) 한국경제신문 96년 2월 17일자.

를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 쓰게 됨에 따른 추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 4>에서 보듯이 사적 한계비용을 높이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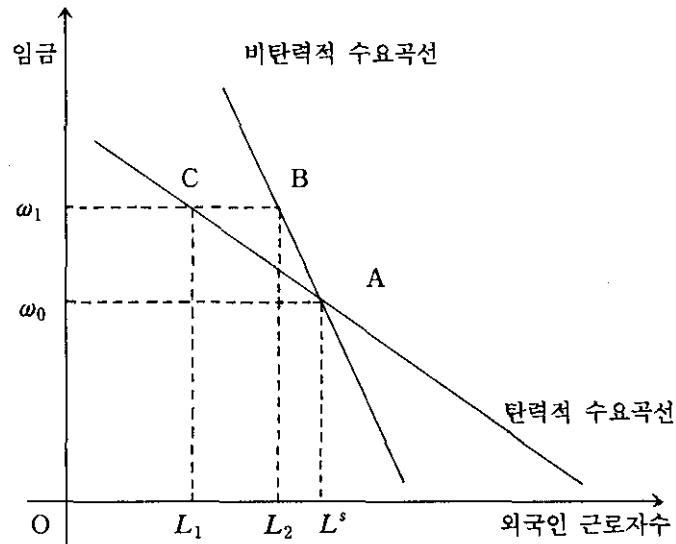
<그림 4>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적정수준으로의 접근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를 쓰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비용(이하에서는 임금으로 대체함) 증가분에 따른 고용의 감소분, 즉 수요탄력성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임금이  $\omega_0$ 에서  $\omega_1$ 으로 상승함에 따른 고용량 감소분은  $(L^s - L_2)$ 가 되고, 따라서 기업의 총인건비는

$\square\omega_0OL^sA$ 에서  $\square\omega_1OL_2B$ 로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고용량은  $(L^s - L_1)$ 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총인건비는  $\square\omega_0OL^sA$ 에서  $\square\omega_1OL_1C$ 로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수요탄력성에 따라 임금의 상승은 고용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수요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은 자명해진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큰 기업체 또는 업종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미 보았듯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적은 기업의 경우 고용허가로 인한 임금상승은 외국인력의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기업에 인건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외국인 근로자 수요곡선



그러면 중소기업 중 어떤 업종·규모의 기업체가 임금상승에 따른 수요가 탄력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Hicks - Marshall laws에 따르면 첫째, 생산물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둘째, 노동과 타생산 요소간이 대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셋째, 대체요소의 공급탄력성이 높을수록, 끝으로 노동이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국인력 권익보호도 되고 외국인력의 사회적 적정수준도 도모할 수 있다.



## 제4장 외국인 노동수요 탄력성 추정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중 어떤 업종·규모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건비에 따른 노동수요 탄력성을 추정하기로 한다. 먼저, 추정모형으로 트랜스로그 Translog 비용함수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추정을 위한 자료를 소개한 후 추정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추정모형<sup>6)</sup>

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비용극소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비용극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min C = \sum_{i=1}^n P_i X_i \text{ subject to } Y = f(X_1, X_2, \dots, X_n)$$

여기서  $P_i$ 는  $i$ 번째 생산요소의 가격이고,  $X_i$ 는  $i$ 번째 요소의 양이며, 생산물  $Y$ 는  $n$ 개의 생산요소의 함수  $f$ 이다.

(1)의 비용극소화와 그에 따르는 요소수요함수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최소비용함수를 얻는다.

$$(2) C^* = g(P_1, P_2, \dots, P_n, Y)$$

$C^*$ 는 각 요소가격에 대응한 최소비용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생산

6) 이 부분은 남성일(1990)의 논문을 상당부분 인용하였음.

함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요소가격에 대하여 일차동차 Homogeneous of degree one in prices이다. 그리고 셰퍼드 Shephard 정리에 의하여  $C^*$ 를 요소가격  $P_i$ 로 편미분하면  $X_i$ 에 대한 요소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

$$(3) \quad \frac{\partial C^*}{\partial P_i} = \frac{\partial g}{\partial P_i} = X_i$$

알렌 Allen의 편대체 탄력성 ( $\sigma_{ij}$ )은 비용함수와 셰퍼드 Shephard 정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4) \quad \sigma_{ij} = \frac{\sum_{k=1}^n P_k X_k}{X_i X_j} \cdot g_{ij}$$

여기에서  $g_{ij} = \partial g / (\partial P_i \partial P_j)$ 이다. 그리고 (4)의 형태로써  $\sigma_{ij} = \sigma_{ji}$ 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4)로부터 요소수요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는데 (3)을 이용하여 (4)를 다시 쓰면,

$$(5) \quad \sigma_{ij} = \frac{\sum_{k=1}^n P_k X_k}{X_i X_j} \cdot \frac{\partial X_i}{\partial P_j}$$

(5)의 우변에  $(P_i/X_j)$ 를 곱하고 나누어 정리하면,

$$\sigma_{ij} = S_j^{-1} \cdot \eta_{ij}$$

여기에서  $S_j = \frac{P_j X_j}{\sum_{k=1}^n P_k X_k}$ 는 총요소비용 중에서  $j$ 번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eta_{ij} = \left(\frac{\partial X_i}{\partial P_j}\right) \left(\frac{P_j}{X_i}\right)$ 는  $i$ 번째 생산요소의  $j$ 번째 요

소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다. 따라서

$$(6) \eta_{ij} = S_j \sigma_{ij}$$

$\sigma_{ij}$ 를 추정하는 데는 (4)의 비용함수  $g$ 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트랜스로그Translog 비용함수를 사용한다.<sup>7)</sup>

$$(7) \ln C^* = f(\ln P_1, \ln P_2, \dots, \ln Y)$$

$\ln(\cdot) = 0$ 에서 평가된 1계 및 2계 도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ln C^* |_{o} = \alpha_0; \quad \frac{\partial \ln f}{\partial \ln P_i} = \alpha_i; \quad \frac{\partial \ln f}{\partial \ln Y} = \alpha_y$$

$$\frac{\partial^2 \ln f}{\partial \ln P_i \partial \ln P_j} = \gamma_{ij}; \quad \frac{\partial^2 \ln f}{\partial \ln P_i \partial \ln Y} = \gamma_{iy}; \quad \frac{\partial^2 \ln f}{\partial \ln Y \partial \ln Y} = \gamma_{yy}$$

그러면 잔항remainder을 무시한 테일러 시리즈Taylor series 근사화는 아래와 같다.

$$(9) \ln C^* = \alpha_0 + \sum_{i=1}^n \alpha_i \ln P_i + \alpha_y \ln P_y + 1/2 \sum_{i=1}^n \sum_{j=1}^n \gamma_{ij} \ln P_i \ln P_j$$

$$+ 1/2 \gamma_{yy} (\ln Y)^2 + \sum_{i=1}^n \gamma_{iy} \ln P_i \ln Y$$

모든 비용함수는 요소가격에 대하여 일차동차이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0) \sum_{i=1}^n \alpha_i = 1, \quad \sum_{i=1}^n \gamma_{ij} = \sum_{j=1}^n \gamma_{ij} = 0, \quad \sum_{i=1}^n \gamma_{iy} = 0$$

7) Translog 비용함수 사용의 장점은 남성일(1990)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다. 비용함수 (9)는 직접 추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 셰퍼드Shephard의 정리를 이용한 요소비용 비중식share equation으로 전환되어 추정된다.

$$(11) S_i = \frac{\partial \ln C^*}{\partial \ln P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n P_j + \gamma_{iy} \ln Y$$

(11)은 추정방정식의 기본을 이룬다. (11)은  $n$  개의 생산요소를 가정하여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생산함수의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만을 가정하기로 한다.

(11)을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의 비중방정식을 정리하면

$$(12) S_1 = \alpha_1 + \gamma_{11} \ln P_1 + \gamma_{12} \ln P_2 + \gamma_{1y} \ln Y$$

$$(13) S_2 = \alpha_2 + \gamma_{21} \ln P_1 + \gamma_{22} \ln P_2 + \gamma_{2y} \ln Y$$

이 된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수요 탄력성( $\eta_{11}$ )이므로 (12)의  $S_1 = \alpha_1 + \gamma_{11} \ln P_1 + \gamma_{12} \ln P_2 + \gamma_{1y} \ln Y$ 에서  $\gamma_{11}$ 를 추정할 뒤 빈스워거Binswarger(1974)의 증명에 따라  $\eta_{11} = (\gamma_{11}/S_1) + S_1 - 1$ 에  $\gamma_{11}$ 을 대입함으로써  $\eta_{11}$ 을 도출하게 된다.

## 2. 추정자료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서 발간하는 1995년도판 「한국기업총람」에서 기업규모 300인 미만 기업체 2500개 중 이를 이단층화 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뽑은 1,408개 업체이다. 물론 이 표본에서도 「상장법인」을 제외하였는데, 외국인 사용기업체에서 상장법인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8)</sup> <표 12>와 <표 13>은 각각 업종별, 규모별로 표본을 살펴 본 것이다.<sup>9)</sup> 먼저 업종별로 살펴 보면 조립금속, 기계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화합물·화학제품, 섬유·의복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별로 100-199인이 가장 많고 50-99인, 200-299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표본에서 음식료품과 1-9인 규모의 기업을 포함시켰는데, 이들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사용업체에서 빠져 있으나 장차 이들도 포함시키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8) 보다 정밀한 자료는 외국인 사용 기업체와 한국기업총람에 나타나는 기업체를 matching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국인 사용기업체가 무려 10,000개가 넘고, 반면 한국기업총람에 나타나는 기업체는 2,472개에 불과해 이를 일일이 matching시키는 일은 무의미함.

9) 한국기업총람의 업종별 분류와 통상적인 업종 분류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한국기업총람에서는 가구·기타제조업으로 되어있는 반면, 통상적 업종분류에서는 기타제조업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기타 제조업을 목재·나무제품에 포함시켜 분리하였다. 가구·기타 제조업에서 대부분이 가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2> 표본의 구성(업종별)

	업체수	구성비(%)
음식료품	106	7.5
섬유, 의복	202	14.3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	32	2.3
목재, 나무제품, 가구	51	3.6
종이, 종이제품, 인쇄, 출판업	97	6.9
화합물, 화학제품	224	15.9
비금속 광물제품	105	7.5
제1차 금속	86	6.1
조립금속, 기계장비	505	35.9
계	1,408	100.0

<표 13> 표본의 구성(기업 규모별)

	업체수	구성비(%)
1-9인	6	0.4
10-19인	19	1.3
20-49인	135	9.6
50-99인	377	26.8
100-199인	573	40.7
200-299인	298	21.2
계	1,408	100.0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 중 노동비용의 비중변수( $S_1$ )는 부가가치 생산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표

본에서는 종업원 구성에 대한 상세한 분류없이 전체적 종업원수만 나와 있어 인건비를 손익계산서의 인건비와 제조원가 구성 추이의 노무비를 합하였다. 임금변수( $P_1$ )는 일인당 인건비로 이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건비와 노무비를 합한 후 이를 종업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자본비용은 금융비용 부담률과 감가상각의 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기업총람에서는 감가상각비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형고형자산, 무형고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합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신하였다.

<표 14>와 <표 15>는 표본기업의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가치 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S_1$ )은 40-50%에 달하고 있으며, 중·화학 부문보다는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종업원수( $L_1$ )에 있어서 경공업 부문이 중화학 부문보다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다. 한편 1인당 연간 노동비용( $P_1$ )을 살펴보면 경공업 부문의 노동비용이 중·화학 부문에 비해 낮은데, 이는 어느 정도의 기능 또는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규모별로 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인건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업종별로 볼 때 주로 중·화학 부문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같은 해석이 내려지게 된다. 그 외에 사용자 자본비용( $P_2$ )을 살펴보면 규모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이 중화학보다 약 1.5배 비싸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 4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0) compensations differential theory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보다 나쁘거나 또는 위험이 큰 작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또는 보상하는 의미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표 14> 표본기업(업종별)의 변수별 평균값

	사례수	S1	L1	P1	P2	Y
음식료품	106	0.4768	128.198	15.7065	20.8191	19787.27
섬유, 의복	202	0.5144	140.564	12.9704	25.3760	16878.27
건축, 가방, 마구류, 신발	32	0.5392	152.719	11.5939	16.7636	18711.44
목재, 나무제품, 가구	51	0.5188	145.216	14.2169	10.5849	16573.35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97	0.5048	141.155	16.1935	20.8592	16474.20
화학물, 화학제품	224	0.4577	118.138	17.0198	19.9362	18042.93
비금속 광물제품	105	0.4656	118.733	16.3385	8.1884	14171.15
제1차 금속	86	0.4222	106.581	16.6421	7.5269	24405.01
조립금속, 기계장비	505	0.5133	143.285	15.5919	6.2679	18483.51

S1 : 부가가치 생산비 중 노동비용의 비중  
 L1 : 종업원수(명)  
 P1 : 종업원 1인당 연간 노동비용(백만 원)  
 P2 : 사용자 자본비용(%)  
 Y : 매출액(백만 원)

<표 15> 표본기업(규모별)의 변수별 평균값

	사례수	S1	L1	P1	P2	Y
1-9인	6	0.3793	6.000	81.1528	8.4291	5671.17
10-19인	19	0.2849	15.895	22.1190	15.4151	14821.00
20-49인	135	0.4293	38.052	20.1710	16.2637	12033.37
50-99인	377	0.4811	76.300	15.9588	14.9434	13134.86
100-199인	573	0.5111	141.798	14.1841	14.0356	18338.30
200-299인	298	0.5175	244.742	13.4584	11.2595	27220.27

\* 변수는 <표 14>와 동일함.



### 3. 추정결과

<표 16>과 <표 17>은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노동의 비중 방정식인  $S_1 = \alpha_1 + \gamma_{11} \ln P_1 + \gamma_{12} \ln P_2 + \gamma_{13} \ln Y$ 을 업종별, 규모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계수인  $\gamma_{11}$ 은 두 번째 열에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이들 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작게는 0.04에서 크게는 0.12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규모별로 볼 때

<표 16> 업종별 회귀계수 추정치

	INTERCEPT	$\log P_1$	$\log P_2$	$\log Y$
음식료품	0.8701 (0.0001)**	0.0464 (0.1715)	-0.0075 (0.5015)	-0.0521 (0.0111)*
섬유, 의복	0.5240 (0.0022)**	0.0716 (0.0002)**	0.01465 (0.0691)	-0.0231 (0.1723)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	1.4152 (0.0013)**	0.1193 (0.005)**	-0.0100 (0.6144)	0.1169 (0.0088)**
목재, 나무제품, 가구	0.6497 (0.0828)	0.05545 (0.2595)	-0.0267 (0.2222)	-0.0240 (0.5512)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0.9727 (0.0001)**	0.1130 (0.0013)**	0.0199 (0.0809)	-0.0861 (0.0007)**
화학물, 화학제품	1.0211 (0.0001)**	0.0438 (0.0570)	0.0045 (0.5705)	-0.0732 (0.0001)**
비금속 광물제품	0.8626 (0.0039)**	0.0934 (0.0014)**	-0.1151 (0.6076)	-0.0665 (0.0301)*
제1차 금속	1.0901 (0.0001)**	0.1005 (0.0257)*	0.0388 (0.1353)	-0.1031 (0.0001)**
조립금속, 기계장비	0.7456 (0.0001)**	0.0905 (0.0001)**	-0.0178 (0.0191)*	0.0465 (0.0001)

1. ( )는 유의확률임.

2. '\*\*'는 유의수준 0.01에서, '\*'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들 계수값 중 음식료품, 목재·나무·가구 및 화학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성이 있으며,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을 빼고는 모두 유의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규모별 회귀계수 추정치

	INTERCEPT	$\log P_1$	$\log P_2$	$\log Y$
1-9인	1.0002 (0.4576)	0.1074 (0.3807)	-0.0314 (0.6275)	-0.1211 (0.4220)
10-19인	0.7755 (0.0052)**	0.1494 (0.0495)*	-0.0363 (0.1562)	0.0955 (0.0108)*
20-49인	1.1168 (0.0001)**	0.1267 (0.0001)**	-0.0282 (0.0117)*	-0.1096 (0.0001)**
50-99인	0.9893 (0.0001)**	0.1267 (0.0001)**	-0.0041 (0.4973)	-0.0906 (0.0001)
100-199인	1.3257 (0.0001)**	0.1213 (0.0001)**	0.0044 (0.3735)	-0.1181 (0.0001)**
200-299인	1.4473 (0.0001)**	0.1301 (0.0001)**	0.0025 (0.7169)	-0.1259 (0.0001)**

1. ( )는 유의확률임.
2. '\*\*'는 유의수준 0.01에서, '\*'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회귀분석에 의해서 구한  $\gamma_{11}$  값을  $\eta_{11} = \frac{\gamma_{11}}{S_1} + S_1 - 1$  에 대비시켜 얻은 노동수요 탄력성의 값을 <표 18>과 <표 19>에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18> 업종별 노동수요 탄력성

	$\eta_{11}$
음식료품	-0.4259
섬유, 의복	-0.3465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	-0.2395
목재, 나무제품, 가구	-0.3743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0.2714
화합물, 화학제품	-0.5325
비금속 광물제품	-0.3338
제1차 금속	-0.3397
조립금속, 기계장비	-0.3103

<표 19> 규모별 노동수요 탄력성

규 모	$\eta_{11}$
1 - 9	-0.3375
10 - 19	-0.1908
20 - 49	-0.2755
50 - 99	-0.2556
100 - 199	-0.2515
200 - 299	-0.2310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업종별로나 규모별로나 탄력성의 값은 대략 0.2-0.3으로 대단히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sup>11)</sup> 여기서 비탄력적이라 함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비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별로 줄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비시켜 볼 때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는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외국인연수협력단에서 조사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업체 의견조사에서도, 고용허가제도 도입되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연수생의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답변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의도가 외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면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는 비용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용허가를 받을 인센티브가 없다. 즉,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라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 기업체를 불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마저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비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줄이려는 의도는, 즉 외국인을 사회적 적정 수준만큼 유입시키려는 의도는, 노동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사적 한계비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굳이 이 체도를 도입하겠다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차별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노동수요 탄력성이 큰 부문·규모부터 시도하되 그 외의 업종·규모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연수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1) 음식료품, 화학제품, 나무제품 등의 탄력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이들의  $\gamma_{11}$ 의 값들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한다.

한 불법취업 등 사회적 적정규모와 사적 규모와의 차이는 「고용허가제」라는 경제주의에 입각해서라기 보다는 법률적·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국내 근로자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다. 국제적으로 WTO체제 출범은 자본은 물론 인력의 국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장 큰 유입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력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논의하여 보았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은 이윤의 상승으로 재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승수효과를 유발하여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상승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이들 인력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단순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뿐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가용인력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효과는 논리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실증결과는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단순인력의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만 있으면 외국인력의 유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경제적으로 긍정적일지는 몰라도 이들 인력의 유입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용허가

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업에게는 비용을 가중시켜 고용허가를 받을 인센티브가 없으며, 따라서 허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이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불법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비록 도입하더라도 이들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요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인 업종·규모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 기업체에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성일, 「임금상승과 요소대체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비교」, 서강경제논  
문집, 1990. 11.
- 노동부,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국내취업에 관한 정책대안」, 1994. 12.
- \_\_\_\_\_, 「외국인 근로자 전망대책」, 세계화추진기획안, 1995. 7.
- \_\_\_\_\_, 「주요국의 외국인력 고용정책」, 1995. 5.
- 노사관계 고위지도자과정, 「해외연수생제도의 문제와 정책과정」, 한국노  
동연구원, 1995. 4.
-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995. 9.
- 박영범, 「비숙련 외국인력의 활용과 산업기술연구제도」, 중소기업연구원,  
1995. 9.
- 백석현, 「해외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  
소, 한국경제연구원리, 1993. 5.
- 송병준, 「외국인력 문제의 실체와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4. 7.
- \_\_\_\_\_,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  
원, 1993. 6.
- 외국인연수협력단, 「외국인 연수생 활용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1995. 4.
- \_\_\_\_\_,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업체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9.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외국인 실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1995. 4.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총람」, 1995.
-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언론보장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  
 론회」, 1995. 4.
- Chiswick Barry, 「Illegal Aliens : Their Employment and Employers」, *Ka-  
 larmazoo*, Michigan, 1988.
- George E. Johnson, 「The Labor Market Effect of Migr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wes*, vol 33, no 3, 1980. 4.
- George. J. Borjas, 「Friends or strangers」, N. Y. Basic books, 1990.
- George. J. Borjas and Richard B. Freeman, eds, 「Immigrants and the Work  
 Forc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 R. G. Ehrenberg and R.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5th edition,  
 Harper and Collins, 1993.
- 後藤純一, 「外國人勞動力の經濟學」, 東京經濟新聞社, 1990. 7.

---

부 록



<부표 1> 업종별, 규모별 노동수요 탄력성

업 체	규 모					
	1-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음식료품	-	-	-0.1425	-0.3129	-0.3345	-0.0291
섬유, 의복	-	-	-0.2731	-0.3981	-0.1940	-0.1874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	-	-	-	-0.4390	-0.2050	-0.1555
목재, 나무제품, 가구	-	-	0.4476	-0.2080	-0.0694	-0.2663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	-	-0.4402	-0.2666	-0.2549	-0.0226
화합물, 화학제품	-	-	-0.4995	-0.2864	-0.2290	-0.2258
비금속 광물제품	-	-	-0.2160	-0.1147	-0.1298	-0.1265
제1차 금속	-	-	-0.5939	0.0925	-0.0662	-0.5194
조립금속, 기계장비	-	-0.7129	-0.0179	-0.1324	-0.2626	-0.2520

<부표 2> 규모별, 업종별 회귀계수 추정치

업종	규모	1-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음식료품	INTERCEPT	-	-	1.2439	1.2975**	1.6839**	1.5130**
	log P <sub>1</sub>	-	-	-0.1837	0.1051	0.0834	0.2352**
	log P <sub>2</sub>	-	-	-0.0263	-0.0390	0.0122	0.0268
	log Y	-	-	-0.1385**	0.1133*	-0.1465**	-0.1639**
섬유, 의복	INTERCEPT	-	-	0.1997	0.6535	0.7784**	0.7021*
	log P <sub>1</sub>	-	-	0.1272	0.0494	0.1439**	0.1523**
	log P <sub>2</sub>	-	-	-0.0482	0.0020	0.0092	0.0357*
	log Y	-	-	-0.0031	-0.0302	-0.0636**	-0.0599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	INTERCEPT	-	-		3.9907	1.7041	1.7297
	log P <sub>1</sub>	-	-		0.0273	0.1341	0.1645
	log P <sub>2</sub>	-	-		-0.0579	0.0049	-0.0060
	log Y	-	-		-0.3685	-0.1500	0.1545
목재 나무제품 가구	INTERCEPT	-	-	1.5812*	1.3568	1.7135*	1.1712
	log P <sub>1</sub>	-	-	-0.4491*	0.1239	0.2163**	0.0715
	log P <sub>2</sub>	-	-	-0.0941**	-0.02708	0.0156	0.0097
	log Y	-	-	0.0374	-0.0512	-0.1850*	-0.0760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INTERCEPT	-	-	1.2111	0.9956	0.1971**	0.9020
	log P <sub>1</sub>	-	-	0.0325	0.1248	0.1170*	0.2376*
	log P <sub>2</sub>	-	-	-0.3484*	0.0258	-0.0042	0.0794
	log Y	-	-	0.0137	-0.1016	-0.1837**	-0.1181
회합물 화학제품	INTERCEPT	-	-	1.2407**	1.4933**	1.8895**	1.7146**
	log P <sub>1</sub>	-	-	0.0382	0.1156**	0.1420**	0.1400**
	log P <sub>2</sub>	-	-	-0.0001	0.0016	0.0229*	0.0051
	log Y	-	-	-0.1053	-0.1455**	-0.1926**	-0.1591**
비금속 광물제품	INTERCEPT	-	-	1.4671**	1.4746*	0.6902	1.8461**
	log P <sub>1</sub>	-	-	0.1529*	0.1953**	0.1865**	0.1869**
	log P <sub>2</sub>	-	-	-0.0639	-0.0153	0.0229	-0.0925
	log Y	-	-	-0.1480**	-0.1644*	-0.0749	0.1674**
제1차 금속	INTERCEPT	-	-	3.0828**	0.4539	1.6028**	2.3259*
	log P <sub>1</sub>	-	-	-0.0034	0.2762**	0.2180**	0.0090
	log P <sub>2</sub>	-	-	-0.1485*	0.0299	0.0475	0.0256
	log Y	-	-	-0.2596**	-0.0908	-0.1806**	-0.1888**
조립금속 기계장비	INTERCEPT		1.0776	0.8425	0.6404**	1.1435**	1.4659**
	log P <sub>1</sub>	-	0.0116	0.2396**	0.1825**	0.1116**	0.1176**
	log P <sub>2</sub>	-	-0.1272	-0.0414	0.0001	-0.0143	-0.0356**
	log Y	-	0.0633	-0.1126*	-0.0673**	-0.0932**	-0.1192**

\*\*는 유의수준 0.01에서, \*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1. 외국인 연수생 인력난 해소정도

- 현재 본회가 추천한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로는 응답업체 비율로 볼 때 큰 도움이 된다 47.7%, 다소 도움이 된다 39.8%로 나타난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하여 전체의 87.7%업체에서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

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17.9	39.8	8.3	2.5	1.5

## 2.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 현재 노동부에서 외국인 연수제도를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응답 24.1%, 반대응답 75.9%로 반대응답이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찬 성	반 대
24.1	75.9

### 3.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사유

-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가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시행,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75.9%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임금 지급에 따른 업체 비용부담 가중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점진적, 단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라도 필요인력 활용에 별 애로가 없기 때문 등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은 외국인 연수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고, 또한 저임금으로 미숙한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됨.

(단위 : %)

반대 사유	비율
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임금 지급으로 업체비용 부담 가중	60.4
② 노동3권 보장으로 노사분규, 갈등 우려	5.6
③ 입국허가, 고용허가, 노동허가 등으로 절차 복잡	5.1
④ 외국인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 문제화 심각	4.3
⑤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라도 필요인력 활용에 별 애로가 없음	10.2
⑥ 본격적인 외국인력 도입시기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14.4

### 4. 고용허가제 도입시 외국인 연수생 활용 여부

-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활

용하겠는지 여부에 대해 구태여 활용하지 않겠다 33.3%, 현재 연수생수만큼 활용 36.0%, 현재 연수생보다 축소 14.5%로 나타난 반면, 현재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하여 응답업체의 47.8%가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고임금 지급에 따른 업체부담 증가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거나 축소하겠다고 답하였음.

(단위 : %)

구태여 활용하지 않겠다	현재 연수생수만큼 활용	현재 연수생보다 확대	현재 연수생수보다 축소
33.3	36.0	16.2	14.5

## 5. 외국인 연수제도와 비교한 고용허가제의 효과

-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와 비교하여 고용허가제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고용허가제가 의도하는 법적 처우 개선, 이탈 감소, 취업질서 확립, 불법체류 감소 등의 효과는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효과가 노동부가 의도한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됨.

(단위 : %)

	모르겠다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① 법적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 근로 보장	7.7	45.7	46.6
② 임금의 현실화로 이탈 감소	7.4	48.0	44.6
③ 고용허가로 취업질서 확립	13.1	47.5	39.4
④ 노동부의 사업장 관리로 불법체류 감소	11.1	45.5	43.4